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27일 도회 회의실에서 2018년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종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생활SOC 8.7조 투자 “지역 파급력 적다”

내년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지자체 예산 매칭펀 12조 규모
도 건설업계 “경제수요 제한적”
일자리 창출 효과 회의적 반응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내년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생활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자체 매칭 예산까지 더하면 생활SOC 투자규모는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도시재생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목 중심의 SOC 대신 지역 단위의 생활SOC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의 경우 지자체마다 시행 중인 사업인데다 정부예산이 추가 편성돼도 시군별로 나누면 지역경제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승균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는 수준”이라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계도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오인철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장은 “생활SOC 확대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도 경제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우선시돼야 할 SOC는 상하수도나 도로시설과 같은 낙후시설 개선사업이다”고 밝혔다. 김기섭 신관호



건설협회 강원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27일 도회 회의실에서 2018년 사업현황 점검 및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건협 강원도회 운영위... 지역건설 활성화추 등 보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27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과 임원 참석 하에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전차회의록 요지 발표, 보고사항, 기타 협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 중 진행됐던 국도교통

강원권 발전 협의회, 건설안전 합동캠페인, 상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등 주요 간담회 개최 내용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다음달 3일 강원도 홍천군 힐드로사이 컨트리 클럽에서 치러지는 '2018 사랑나눔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중간보고'도 발표됐다.

내년 생활SOC예산 50% 늘어난 '8.7兆'

여가건강·지역일자리 등 149개 사업 추진
지자체 머칭 더해 내년예산 총 12조원 투자

체육관과 도서관 등 이른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에 지자체 머칭을 통해 내년 예산 총 12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더 많은 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삶의 질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역 일자리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조7000억원의 생활 SOC 예산을 편성해 3대 분야, 10대 과제별로 모두 149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관광시설 등 여가·건강활동 분야에 1조5000억원을 비롯해 도시·어촌·산단재생사업 등 지역밀착·활력제고 분야와 복지시설, 보강 및 미시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각각 3조5000억원과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주요 사업별로 지자체 머칭 방식으로 3조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예산 총 1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치감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생활 SOC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권기자 skbong@**

내년 예산안 생활SOC 8.7兆 편성... 주요 사업은

문화·체육분야 1.6兆... 안전인프라 개선 2.3兆 투입

(체육센터·도서관·과학교육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표되는 기존 SOC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편성하는 8조7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 예산안 또한 12개 재정지출 분류상 SOC 분야 보다는 대부분 복지나 생활안전, 환경, 문화 등 다른 분야다.

정부의 생활 SOC 확충방안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투자확대 주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사상 최초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지사가 연석회의를 열어 3대 분야별 10대 과제를 선정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협의를 통해 149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

과제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문화, 체육 등 근거리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적으로 체육센터 160개와 작은 도서관 243개를 설치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은 복개폐형·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과 AR 등 가상체험관 19곳을 신설하고 과학관과 박물관 전시물을 개편하는 등 지역별 과외와 즐길거리 확충에도 6000억원을 투자한다.

낙후 도심 생활여건 개선 '1.5조' 도시재생 뉴딜 168곳으로 확대 산단 재생도 생활SOC로 추진

정부는 또 낙후 도시의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도 각각 1조5000억원과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을 신규 100곳을 포함해 168곳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도 70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촌마을 1300곳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군 단위 상수도 정비(66곳)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00곳)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및 어업 축산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도 생활 SOC 사업에 포함했다.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 연구, 생산기능을 포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7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생활 SOC 범주로 묶어 추진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역 일자리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다. 노후산단 환경개선편에 2500억원을 출자해 노후산단 재정비를 지원하고 문화, 체육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단 13곳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23개 노후산단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지원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과 다세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성능보강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57개소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및 화재 알림시설 2만500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사업에도 각각 5000억원과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및 지역아동센터 등 1200개 복지시설과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 바람길 숲과 60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하철 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사업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609개 공공기관 유류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 농가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권기자 skbong@**